

동해시, 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

식중독 예방·위생점검 동시 추진

동해시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식품점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요 원인이 노로바이러스이며 발생 장소 또한 일반음식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굴, 회 등 수산물 취급 업소와 배달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신제적인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먼저 굴·회 등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과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활동은 식중독 소통전담관리원과 동해시가 함께 참여해 현장 대응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합동 점검은 2월 5일(목), 관내 수산물 취급 업소 15개소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 안내 ▲예방 자율점검표 배부 ▲예방수칙 홍보물 배부 등 교육·홍보 중심의 활동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달 음식점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다소비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위생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내용은 △영업장 및 조리장 위생적 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진열·보관·판매 여부 △개인위생관리(위생모·위생복·마스크 착용,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이행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판매제품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등 식품 안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횡성군, 26년 군용기 소음피

해 보상금 접수…28일 마감

횡성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횡성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에서 '2026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3일 횡성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보상금 접수 인원은 현재 8,050명으로 접계됐다. 이는 전년도 전체 접수 인원(16,072명) 대비 약 50% 수준으로, 군은 신청 기한을 놓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소음대책지역(횡성을 29개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해 신청을 놓친 대상자도 이번 기간에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처는 횡성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에 마련됐으며, 오는 2월 28일까지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단, 매주 일요일과 설 연휴 기간(2월 14일~18일)은 접수처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들은 국방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mnoise.mnd.go.kr)을 통해 본인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보상금 신청서와 통장 사본이며, 지난해 직장 근로 경력이 있는 경우 재직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특·행정수도 완성' 입법촉구 및 국회 토론회 개최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원하는 강원·제주·세종·전북의 절실향과 메시지 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이하 '협의회')는 2월 4일(수)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원도민일보사와 한기호·송기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는 3특5국의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분배를 주문하고, 국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였다.

먼저 협의회는 특별법 신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입법촉구 결의를 하고, 특별자치시·도 발전방안과 재정분권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4개 시·도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은 국회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공감 하지만, 현재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정책구상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소외와 역사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즉,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5국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되고자 차치 분권 입법 개정안도 '초광역권' 위주로 반영되어 있는 반면, '초광역권'을 구성하기 어려운 독자적 자립모델인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제도와 정책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중협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특별자치시·도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규

제 완화를 실행하는 차지분권의 실험장(테스트베드)이자 선도 모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자치시·도는 그동안 각(各) 특별법을 통해 권한이양과 규제 해소 위주의 입법을 추진해 왔고, 다른 시·도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재정하는 등 제로섬 게임(Zero-sum)의 특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국

회와 정부의 광역 행정통합에 대한 정책과 입법은 이해되지만, 자칫 지역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에 여중협 부지사는 "먼저 밤의 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도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동시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특별한 희생에

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과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국정기조가 특별자치시·도에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023년 11월 27일 출범한 강원·제주·세종·전북의 협의체로 지난 해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에서 각 지역 특별법 심사가 불발된 이후,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특별법 입법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오고 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표회장 시도를 맡고 있다.

김민석 기자

강릉시,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지역 소비 ↑



시장 지킴이 지원사업, 소방시설 개선 등에 총 8억 5천 4백만 원을 지원해 전통시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상인과 이용객 모두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적인 소비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문진종합시장 문화관광 협회 시장 유통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해 주문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는 전통시장 방문이 인근 상권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2026년으로 운영 4년 차를 맞은 월화거리 야시장은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연과 이벤트를 확대하고 운영 안정성을 높여, 저녁 시간에도 즐길 수 있는 도심형 소비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전통시장과 도심 상권에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지역 소비가 모이고 확산되는 핵심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시민의 일상 소비가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속초시, 2026년 환동해권 대표 크루즈 거점항 도약 박차

수용태세 강화·글로벌 포트세일즈 등 다각적 활성화 전략 전개



속초시는 '2026년 속초항 크루즈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관광재단과 함께 내실 있는 관광수용태세 강화와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한 환동해권 크루즈 대표 항만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올 한 해 속초항에는 총 6항자의 크루즈가 입항한다. 4월 17일 웨스테르 담호(8만 2천862t)를 시작으로, 5월 12일 코스타세레나호(11만 4천261t), 9월 17일 더월드호(4만 3천188t)가 입항할 예정이다.

10월에는 17일 웨스테르 담호를 비롯해 19일과 25일에는 시번양코르호(4만 1천865t)가 입항한다. 특히 더월

드호와 시번양코르호는 속초항에 처음으로 입항하는 크루즈선으로 이는 시가 그동안 글로벌 크루즈 박람회 참가와 선사 관계자 대상 포트세일즈를 통해 속초항의 우수한 인프라와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2026년에는 최근 국제 정세 변화를 기회로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아시아 시장 다변화 전략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최근 중·일 간 외교적 긴장으로 인해 일본 기항을 고려하던 중국발 크루즈 수요가 한국으로 전환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시는 이를 물

량을 속초항으로 유지하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실제로 중국발 크루즈 기항 수요 증가 관련 지난 19일 해수부가 기항 수요가 늘어나는 부산항에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한 데다가 속초항도 이달 초 중국발 크루즈의 입항 문의가 있는 등 속초항 크루즈 기항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본의 신규 선대 확장(미초이 오션 크루즈 등)에 맞춰 기항지 다변화 수요를 선점하고, 선식 배정 등 구체적 협의가 진행 중인 러시아 국적 크루즈선의 신규 기항 가능성도 적극 타진해 지속 가능한 미래 수요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관광재단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비 등 추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하반기 입항 대응력을 높이고 관광 프로그램 다각화에 나선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단순한 기항을 넘어 국제 정세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중국, 일본, 러시아를 잇는 아시아 크루즈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지난해 상하이 국제 크루즈 서밋에서 '아시아 우수항만상' 수상으로 입증된 속초항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속초를 환동해 크루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시민과 가까운 '안전한 순찰거점 운영 협약'

원주시는 지난 3일 지정면 샘마루 공원에서 자율방범활동 지원을 위한 순찰거점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근린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편의 공간에서 자율방범 순찰 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지역 자율방범대가 샘마루 공원 내 휴게시설을 야간 및 취약 시기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방범 활동이 가능해지고, 생활과 밀착한 장소에서 방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 안전과 밀접한 자율방범대와의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일상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평창군,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

평창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2026년 강원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농업인 수당 신청은 지난 2일부터 읍면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9일 까지 진행된다.

농업인 수당은 농업 활동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일 전까지 강원도 내 주민등록과 농업 경영체 등록을 각각 2년 이상 유지한 농업인이다. 다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및 그 배우자,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4월까지 자격 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을 거쳐, 5월 지급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순차적으로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70만 원이며, 평창군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평창 사람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용하 군 농정과장은 "농업인 수당은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보완하고 지역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과 협력해 적극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과 동행하는 품격있는 의회